

국감 초점

국회는 16일 상임위원으로 11일째 국정감사를 벌여 쌀직불금 부정 지급, 금산분리 완화, 금융위기 대처 등을 추궁했다.

“부정 지급된 ‘쌀 직불금’ 회수 대책 있나”

농수산위 행정당국 사전 인지 여부 추궁
정무위 금산분리 완화 싸고 여야 氣싸움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날 총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지급 파동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전 인지 여부를 추궁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갑사원이 쌀 직불금과 관련해 경작실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특정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자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한 사례가 2005년 3천226건, 2006년 1천970건 등이며 중복지급한 금액이 모두 12억3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당지급 규모를 확인하고 신속히 회수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런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마을 이장까지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국가 예산이 나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정무위의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놓고 여야간에 뜨거운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조려하는 친재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등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자본율이 73.6%나 되면서 국부 유출이 심하다”면서 “산업·금융의 융합은 취약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를 10%로 올려도 세계적으로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15%)보다 낮다”면서 “현행법은 국내 은행에 대한 외국 자본의 무차별 사냥으로 금융 산업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하지만, 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선부터 규제 완화를 세계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



김영주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서울지점 대표 등 금융 관련 증인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환을 폭등 등으로 국민이 불안한데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금융 시장이 안정된 이후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개인 금고로 만드는 것”이라며 “재벌특혜법, 삼성특혜법”이라고 목적을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융기관 외면이 전남 조선산업 위기 불러”

국감브리핑

정무위 김동철 의원



중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정부의 오락가락 산업정책, 금융기관의 정부 눈치보기 등이 도를 넘어서서 지역경제

정부가 조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서도 서남해안 중소형 조선산업이 어려움에 빠진다면 이 지역 전체가 엄청난 혼란과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략산업이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과 예산, 국가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서남해안의 중소형 조선산업은 지역경제 및 수출산업의

“산단공단 해외출장 급증...외유성 의혹”

지경위 주승용 의원



에 달하는 등 해외출장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공단이 해외출장에 쓴 비용도 2005년 7억9천여만 원에서 2006년 9억8

천여만 원, 2007년 15억2천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 출장에 20여명 안팎의 업체 직원과 4~5명의 공단 직원인 평균 2천300여만 원 이상을 들인 결과가 2004년엔 10회에 불과했으나 2005년 43회, 2006년 74회, 올 들어 7월까지 23회

“균특법 개정안, 오히려 지방발전 저해”

전국 시·도 발전연구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내놓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분권 의지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등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부산·대구·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 발전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연구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균특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시도연구위원회는 이날 주제발표문에서 “균특법은 권역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광역기위)를 설치하도

록 돼 있으나 위원회의 권한·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또 이 기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처럼 상정돼 있어 중앙정부가 16개 광역단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법의 개정 목적과 취지에 명시된 광역경제권 단위의 자율과 창의라는 핵심가치가 실제 개별법 조항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사업집행 단위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의 '광역발전계정'이 중앙 각 부처로 나눠진 점을 지적하며 이를 지역발전계정과 같이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역경제권 호남 배제 망발 사과하라”

광주·전남 정치권 균발위 강력 비난...靑 등에 항의 서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 전남·북이 호남 소외를 들어 '5+2광역경제권' 사업을 지연시키면 호남권을 제외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전남도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5일 호남이 '5+2 광역경제권'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면 호남을 배제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호남을 무시하는 지극히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호남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발언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망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양심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호남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귀담아 듣고 광역경제권구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의회 의장은 청와대와 관계기관에 광역경제권 재검토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남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합의를 전제로 하며 기구가 없으면 사업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며 “때문에 호남권이 사업을 지연시키면(호남권을) 배제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고 광주, 전남·북은 사업 재원이 지원될 수 없다”고 말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재산범죄 피해액 매년 4조원...회수 대책은”

법사위 우윤근 의원



▲2006년 3조6천558억원 ▲2007년 3조7천277억원 등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된 금액은 총 2천21억 원으로 피해액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 우 의원은 “형법상 다른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범죄 피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당국의 치밀한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조3천130억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일중한의원' (Iljung Han Hospital) featuring a list of medic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ad includes a logo, a list of services like '진료분야' and '진료시간', and a phone number '062) 676-1075'.

Advertisement for '수소수' (Hydrogen Water) featuring a woman holding a bottle and a list of benefits. The ad includes the text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and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along with a list of features and contact information.